

大韓協會의 政黨論과 政治活動

柳 永 烈*, 朴 哲 河**

목 차

1. 머 리 말
2. 대한협회의 현실인식
 - (1) 일본에 대한 인식
 - (2) 의병에 대한 인식
3. 대한협회의 政黨論
 - (1) 정부론과 정당정치론
 - 2) 정당건설론
4. 대한협회의 政治活動
 - (1) <시국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 이완용 내각 퇴진운동
5. 맺 음 말

1. 머리말

大韓協會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던 國權恢復運動, 근대화 운동 또는 국민국가건설운동과 관련하여 그 조직과 운동 및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므로 국내의 정세 변화와 주체적 조건에 따른 운동과 사상의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애국계몽 시기의 운

* 人文大 史學科 教授 ** 史學科 博士過程

동세력을 구분하고, 그 정치사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¹⁾

필자는 애국계몽시기 특히 대한협회 시기에 있어서 그 지도세력의 政治權力 지향이 그들의 국권회복 논리의 전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대한협회 지도세력의 현실에 대한 인식 태도와 현실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은 그들의 국권회복운동 방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운동세력이 국권회복운동과 동시에 大韓帝國 또는 통감부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 政治運動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운동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운동 형태를 달리하며, 그 정치론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먼저 대한협회의 일본과 의병에 대한 현실 인식을 살피고, 다음으로 대한협회의 정부론, 정당정치론, 정당건설론을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대한협회의 내각 퇴진운동 등 본격적인 정치운동을 밝혀보고자 한다.

2. 대한협회의 현실인식

개인이나 단체나 모든 사회운동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한협회의 국권회복논리는 물론 정치운동도 당시 세계적인 사상의 흐름과 한국의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본(혹은 통감부)의 대한정책, 국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동향, 의병을 비롯한 민중의 동향 등의 주객관적인 정세에 따라 그 방법 및 내용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던 대부분의 지식인 및 정치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대한협회가 현실을 인식하는 데 기초가 된 것은 社會進化論이었다.

대한협회는 당시의 국제사회를 기본적으로 生存競爭·優勝劣敗·弱肉強食의 사회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劣敗者로서 노예의 상태 또는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국가는 외국의 지도 보호를 받는 국가적

- 1) 趙東杰, 『韓末啓蒙主義의 構造와 獨立運動上的의 位置』,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지식산업사, 1989); 金度亨, 『大韓帝國期の 政治思想研究』(지식산업사, 199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역사비평사, 1993)
- 2) 大韓協會, 『敬求志士同情』, 『大韓協會會報』(이하 『會報』로 略함) 제8호(1908.11), 57쪽 참조

비운과 국민적 치욕의 상태에 있다고 파악하였다.²⁾ 또한 민족의 열패와 국가의 보호 상태는 그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문명진보와 국력 양성에 힘쓰지 않은 우리 자체에 있다고 인식하였다.³⁾ 이처럼 우승열패·생존경쟁·약육강식 등 사회진화론적 원리를 받아들일 때, 대한협회가 열패 민족의 처지와 보호 국가의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국민적 단결과 문명진보, 실력양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착이었다.⁴⁾

1) 일본에 대한 인식

사회진화론적 시각에 입각한 대한협회의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론은 그들이 일본의 대한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한협회의 회장 金嘉鎮은 1908년 9월 〈我國有識者の 日本國에 對한 感念〉이란 논설에서, 당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排日思想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한 예로 특히 일부 정치세력이, 당초 한·일간의 조약은 互相對等한 것이었는데 일본이 자신의 강대함을 믿고 을사5조약·정미7조약 등을 체결하여 한국을 併呑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한·일간의 조약 체결은 동양의 形勢上 일본의 自衛의 필요성과 한국의 독립유지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양국의 和意는 당연한 형세라고 보았다.⁵⁾

이러한 인식은 1910년 1월 尹孝定의 〈大韓協會의 合邦論에 對한 意見〉에 이르면 보다 분명해진다. 그에 따르면,

-
- 3) 呂炳鉉, 「義務教育의 必要」, 『會報』 제2호(1908.5), 9~10쪽. 海雲子, 「進歩하라 同胞여」, 『大韓每日申報』(1908.9.27)의 한 寄書에서도 '각 민족이 경쟁하는 세계를 당하여 進하여 강한 자가 退하여 약한 자를 멸함은 어찌 탓할 바이리오. 다른 사람이 진보하는 데 내가 진보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은 강한 데 내가 강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탓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 4) 柳永烈, 「大韓協會의 愛國啓蒙思想」, 『李載 稟博士選曆紀念 韓國史學論叢』(한울, 1990), 687쪽. 유영렬은 이러한 대한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의 양성만으로 가능하다"는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론이었으며, 당시 애국계몽운동자들의 일반화된 논리였다고 보고있다.
- 5) 金嘉鎮, 「我國有識者の 日本에 對한 感念」, 『會報』 제6호(1908.9), 1~2쪽 참조.

日本이 對韓政策에 起한 原因은 決코 領土主義에 不在하고 自衛主義에 出한 者라. 然則 日本本位에서는 韓國으로 하여금 他國에 偏依키 不得케 할만한 指導權을 有하여 一方으로 日本의 安寧을 維持하며 一方으로 韓國의 福利를 開拓하여 大和民族의 向上發展을 計圖하면 滿足할지며 韓國本位에서는 日本의 善良한 指導誘掖에 信賴하여 被保護한 範圍內에서 國利民福을 啓發하여 韓國民族의 生存과 繁榮의 希望을 貫徹할 뿐이라⁶⁾

고 했듯이, 일본의 한국 보호정책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安寧과 한국의 福利를 통한 일본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지도를 신뢰하고 일본의 보호하에서 한국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일 뿐 이라고 인식했다.

결국 대한협회는 한국이 강대한 일본을 배척하고 독립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병탄정책을 취하지 않고 보호정치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한·일 양국의 친화관계 속에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⁷⁾ 그리고 대한협회는 '을사5조약'에 규정되었듯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정치는 '한국이 문명 부강해져서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⁸⁾

일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伊藤博文의 對韓政策에 대한 희망적 기대와 함께 일본의 정치가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아시아연대론' 혹은 '東洋平和論'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1904년 2월 체결된 <韓日議定書>에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확신하여 施政改善에 대한 충고를 용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듯이, 일본의 '동양평화론'은 대륙침략의 이데올로기였던 '아시아연대론' 및 '대동합방론'의 핵심논리였다. 동양평화론은 백인종인 서구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황인종인 아시아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것은 아시아의 강자인 일본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日本盟主論과 연결되는 것이

6) 尹孝定, 「大韓協會의 合邦論에 對한 意見」, 『大韓民報』 1910년 1월 20일자

7) 柳永烈, 앞의 글, 688쪽

8) 『韓會函致一進』(聲明書草案), 『大韓民報』 1909년 11월 30일자

며, 여기에는 일본이 미개한 아시아를 지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다.⁹⁾

그런데 대한협회의 부회장 吳世昌은, 일본의 정략가들은 '東洋平和의 大同方針' 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한국에 문명을 강권한다고 하고, 대한협회는 한국 전체의 '精神團'이며 '大東平和의 補助品' 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또한 鄭雲復은 한국시찰을 나온 일본의 神坂지역 실업가들에게 "제군이 선진국민의 의무로 我國人을 善히 지도 계발하여 文明 부강의 域에 달하면 동양의 백년대계를 확립하여 태평 행복을 共享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¹¹⁾ 심지어 金光濟는 호남 지방의 지회를 시찰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은 同洲同鍾이라. 唇齒의 勢가 아님이 없으므로, 文明부강의 영역에 이르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끌어 西勢東漸하는 患을 협력하여 방어하자"고 하였다.¹²⁾ 곧 대한협회는 일본이 서양세력을 공동방어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협력자여야 하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文明化의 모델 국가라고 인식하였다.

대한협회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협회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일본인 고문 大垣丈夫와의 결합을 가능케 하였을 것이다.

대원장부는 한국 병합론을 반대하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三國同盟論의 주창자였다.¹³⁾ 그는 스스로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한국에 왔으며, 자신은 한국의 文明부강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였다.¹⁴⁾ 또한 그는 일본의 한국통치는 병탄주의와 무단주의를 배격하고 영국의 이집트 식민지배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이러한 대원장부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정책은 "埃及(이집트:인용자)內 영국정책의 목적은 애급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伊藤博文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¹⁶⁾ 나아가 그는 '보호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외

9) 동양평화론에 대해서는 金度亨, 앞의 책, 65~68쪽과 박찬승, 앞의 책, 57~58 쪽 참조

10) 吳世昌, 『對照的의 觀念』, 『會報』 제5호(1908.8), 1~3쪽 참조

11) 『大韓民報』, 1909年 6月 17일자 (別報)

12) 金光濟, 『六派의 習慣을 劈破然後에 可以自保』, 『會報』 제6호(1908.9), 75쪽

13) 大垣丈夫, 『告韓國諸君子書』, 『皇城新聞』, 1906년 2월 26일자

14) 大垣丈夫, 『所感一則』, 『大韓自強會月報』(이하 『月報』로 略함) 제5호(1907.1),

44쪽; 『韓國三大病源』, 『月報』 제2호(1906.8), 38쪽

15) 金陵居士, 『隨感短評』, 『月報』 제2호(1906.8), 67~68쪽

교는 일본에 맡긴 채 한국은 국내의 자강에만 노력하여 부강을 통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원장부는 1910년 1월 〈合邦反對의 理由書〉를 발표하면서, 보호정치가 착착 진행되어 외교와 군사, 사법 3권 및 기타 여러 기관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음을 들어, “통감은 최상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종래의 배일파도 一途의 위안을 얻어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합방론을 반대하였다.¹⁷⁾

즉 대원장부의 논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하에서 그는 이 당시에 日鮮同祖論이나 韓民族의 민족성으로서 黨派性을 거론하였던 것이다.¹⁸⁾

대한협회는, 합방론자인 內田良平의 지도를 받는 一進會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대원장부와 결합하여 ‘보호정치’, ‘통감정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의 방략을 세웠던 것이다.

2) 의병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대한협회의 의병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자.

대한협회는 조국정신의 양양과 정치·교육·산업의 발달 등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운동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무력항쟁을 통한 국권회복을 추구하고 있던 의병에 대해서 일정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협회는 의병의 무력행동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한협회는, 義兵이 보호국의 비참한 현실에 공분과 적개심을 참지 못하여 무력행동으로 자신과 동포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모두 국가의 앞날에 대한 悲觀絶望의 소치라고 전제하고, 그 애국정신에는 공감을 표할 수 있으나 그것이 救國濟民의 방도가 될 수는

16) 『韓國과 伊藤侯爵』,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9일자. 『大韓每日申報』에서는 伊藤博文을 언급할 때 統監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侯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共立新報』·『新韓民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곧 일본의 한국에 대한 통감정치는 물론 통감 이등박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행위라 하겠다.

17) 大垣丈夫, 『合邦反對의 理由』, 『大韓民報』 1910년 1월 30일자

18) 金度亨, 앞의 책, 72쪽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의병정신이 '憂國之情'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도탄에 빠진 나라를 병력으로 회복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는 '自國의 地位境遇를 알지 못하고 對國의 地位實力을 헤아리지 못하는' 暴徒의 妄動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국민과 국가로 하여금 더욱 '困難危亡의 상태'에 빠지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¹⁹⁾

또한 대한협회는 국법의 범위를 벗어나 치안유지를 방해하는 의병을 진압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긴급한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大垣丈夫는 이미 대한자강회 시기에 "국가의 질서를 유지할 때 인민의 동요를 제지하기 위해 치안에 방해되는 언동을 허락하지 않음은 문명국의 通意요, 국법에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라 하였고, "다수가 횡행하여 시위운동을 하는 것 같은 만행은 소위 치안방해인즉 효과는 없고 오히려 죄"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활동은 치안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²⁰⁾ 역시 대한협회에서도 "국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文明軌道를 실천하여 國家進運을 計圖"²¹⁾ 하는 것을 그 주된 운동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때 의병의 무력활동은 국법을 벗어난 치안방해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협회는 의병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前途를 자신에게 맡기고 '폭행'을 중지하고 본업에 종사하여 정당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라고 경고하였다.²²⁾ 그리고 의병을 진압하는 것은 정부와 대한협회를 지지하는 '民間有志者'의 긴급한 임무라고 하였던 것이다.²³⁾

대한협회는 정부와 통감부에게 의병을 진정시키는 방침에 있어서 지방인심을 자극하여 반항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협회는 지방소요의 원인을 직업을 잃어 생활상 곤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과 '시국에 대한 悲歌慷慨'로 일어난 것을 구별하여 진압하되 '朝廷의 隆恩' 혹은 국가의 지도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병에 의한 진압은 중지하고 地方 鎮衛隊

19) 尹孝定, 『時局的 急務』, 『會報』 제2호(1908.5), 61~64쪽; 『敬求志士同情』, 『會報』 제8호(1908.11), 57쪽 참조

20) 大垣丈夫, 『本會趣旨』, 『月報』 제1호(1906.7), 23~28쪽 참조

21) 尹孝定, 『大韓協會의 本領』, 『會報』 제1호(1908.4), 47쪽

22) 위와 같음

23) 尹孝定, 『時局的 急務』, 『會報』 제2호(1908.5), 63~64쪽 참조

를 다시 만들거나 韓人 警察隊의 증설을 통해 진압하는 것이 적당한 조치라고 보았다.²⁴⁾

그러나 대한협회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미주에서 활동하던 共立協會가 실력양성과 함께 독립전쟁론에 입각하여 의병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경거망동하여 전쟁을 일삼지” 않되, “우리나라가 아주 망하면 어떤 날이던지 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불가분 국민의 의무병을 불러 군대를 확장”하여 대비하고자 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는 것이었다.²⁵⁾

3. 대한협회의 政黨論

대한협회는 앞에서 설명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정치운동의 중심체를 근대적인 정당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정치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조국정신을 가지고 교육과 식산을 발달시켜 국권을 회복하는 중심단체로서의 정당은 곧 대한협회였다.

대한협회는 1908년 7월 金嘉鎭-尹孝定 체제에 이르러 일본의 보호정치를 인정하면서 국권회복을 꾀하는 단체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一進會가 주장하는 合邦論은 아니었으며, 국권을 회복하는 문제와 함께 정치운동, 나아가 권력장악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특히 대한협회의 김가진-윤효정 체제가 1909년 9월을 전후하여 일진회와의 '聯結' 운동에 참여하려 했던 것은 이완용 내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부론 및 정당정치론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토지에 중점을 두어 군주의 사유 물시하는 전통적인 군주=국가관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즉 “국가에는 스스로 일정한 토지와 인민이” 존재하며,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이지 그 소유자가 아니

24) 「時局에 對한 意見書」, 『大韓民報』 1909년 7월 2일자

25) 「兵役을 服함이 國民의 義務」, 『共立新報』, 1908년 8월 5일자; 金度勳, 『共立協會(1905~1909)의 民族運動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지식산업사, 1989) 참조

라고 하였다. 나아가 국가의 모든 통치기구(統治機關)는 국민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국가의 통치는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를 국민집단과 동일시하는 '국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²⁶⁾

대한협회는 입헌대의정체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건설을 보다 구체화했다. 즉 ① 입헌정체는 平民의 경제 사회적 위치의 향상과 정치참여의 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평민권의 특질'이 있으며, 입헌정체는 '국회대의사'를 통하여 인민이 입법의 책임을 가지고 행정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케 하므로 '대의기관의 특질'이 있다고 하고, ② 대의기관의 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대표, 군권·민권의 법전상 제한, 입법권의 보유, 행정관의 감독으로 대별하고, 입헌대의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국가의 책임자가 되는 국가를 곧 '국민적 국가'라고 규정하였으며, ③ 나아가 구미 열강처럼 일등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헌법의 발포'와 '국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민국가를 構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²⁷⁾

이러한 국민국가론에 기초하여 대한협회는 '국민적' 정부를 주장하였다. 윤희정에 따르면, ① 헌법 이전의 국가는 '계급적 정부'이고 헌법 이후의 국가는 '평등적 정부'이며, 계급적 정부는 '국민의 仇敵'이라 규정하고, ② 정부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관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며, 행정상 나누어서 말하면 내각이고 통괄적으로 말하면 정부라고 하였으며, ③ 국민공동의 사상으로 구성된 정부를 '국민적 정부'라 하고, 문명국의 '책임내각'이 바로 국민적 정부라고 규정하였다. ④ 나아가 책임내각이란 영국에서 비롯되어 군주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하고, 한국도 속히 國會를 조직하여 국민적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즉 국민의 공동사상으로 구성된 '국민적 정부' 곧 책임내각을 국민국가의 정부 형태로 인식하고 책임내각의 구현 곧 국민적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였다.²⁹⁾

또한 대한협회는 근대에 있어서 '최선의 정부'는 국민의 '자유동의'에 근거하여 정치기구를 운용하는 정부 곧 국민다수의 의사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26) 柳永烈, 앞의 글, 694쪽

27) 柳永烈, 앞의 글, 695~696쪽

28)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的 責任』, 『會報』 제1호(1908.4), 30~32쪽 참조

29) 柳永烈, 앞의 글, 696~697쪽

정부라고 규정하고, 특히 '여론정치', '서민참정'의 민주제도를 강조하였다.³⁰⁾

대한협회는 국민적 정부의 수립과 관련하여 정당정치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대한협회는 과거의 朋黨은 公義보다 私利에 치우치는 편벽된 私黨이며, 근대의 정당은 정치상 동일한 주의를 가진 자들이 국리민복을 목표로 조직하여 公義를 존중하는 公黨이라고 인식하였다. 여기서 근대 정당이란 국회를 활동의 중심무대로 하여 여론에 의해 國是를 유지하는 '국민적 정당' 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은 입헌국가의 선결조건이며, 국회개설에 의한 정부감독을 통하여 책임내각과 다수정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하였다.³¹⁾

대한협회는 '국민적 정당론'을 전개하면서 대한협회가 '정당적 기관'이며 장차 '국회의 대표'임을 공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있는 연후에 입헌정체를 실행할 수 있고, 입헌정체가 있는 연후에 국가가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당은 입헌의 선구이고 입헌은 국가의 근거임을 주장하였다.³²⁾ 그리고 外國의 保護政治 아래에 있을지라도 정치상의 주의를 분명히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黨에 대해서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전에는 統監府의 권력으로도 방해하거나 해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³³⁾

그리고 대한협회는 "정부의 당국자가 그 권위를 自恃하며 그 세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동과 압제의 명령으로" 국가와 인민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적당함을 聲明하여 國利民福을 옹호"하는 것이 정당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³⁴⁾

또한 대한협회는 정당의 분립, 특히 양당제를 추구하였다. 安國善은 정부가 비록 책임내각을 조직한다 할지라도 정당이 없으면 '인민이 다수정치를 실행'하기 곤란한데, 문명의 시대에는 인민의 사상이 발달하여 '政治上的主義'가 각기 다르므로 주의가 같은 사람들이 '大同主義'로 결합하여 정당을 결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政黨政治'를 행하는 것이 국가의 정치상 매우 유익한데, 甲黨과 乙黨이 서로 경쟁하여 주의가 時勢에 적절한 당이 정부에 들어가 정치를 행하도록 해

30) 安國善, 「政府의 性質」, 『會報』 제8호(1908.11), 24쪽 참조

31)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 『會報』 제2호(1908.5), 20~25쪽; 安國善, 「政黨論」, 『會報』 제3호(1908.6), 24~26쪽 참조

32)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前號續, 『會報』 제2호(1908.5), 22~23쪽 참조

33) 安國善, 「政黨論」, 『會報』 제3호(1908.6), 25쪽

34) 尹孝定, 「大韓協會의 本領」, 『會報』 제1호(1908.4), 45~47쪽 참조

야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 들어간 그 당의 '第一流의 人物'이 정치의 樞要를 장악하고, 전국에서 '인민이 公選한 代議士'가 國會에서 그 정당의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그 정당의 당원 중에서 제일 유망한 사람을 각부 장관으로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⁵⁾

金成喜는 〈政黨與政黨互監督論〉에서 세계 각국이 현재 자유와 보수 양당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사상이 동일하지 않고 정체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⁶⁾ 그리고 정당의 정부감독권으로써 양당이 존재하면서 정부의 전횡에 대해 연합 공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의 실체로서 대한협회는 자신이 전국의 사상을 통합한 '民聲發表'의 기관이며 "천하국가의 일을 自任"해야 할 '大韓大政黨'임을 표명하였다.³⁷⁾ 김성희는 〈論政黨〉에서 국민적 정당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대한협회는 新集政黨 生命의 기관이니, 장래 국회의 대표요, 전일 헌정연구의 결과"³⁸⁾ 라 하여 대한협회가 곧 국민적 정당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一進會를 자신과 다른 주의를 가진 정당으로 간주하여 당시 양당제의 구도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정당 건설론

대한협회는 창립 초부터 앞에서 설명한 정부론과 정당론에 기초하여 정당정치를 통한 권력의 장악을 전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미 대한자강회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대한자강회의 발기인들은 警務廳의 요청에 따라 자강회 취지·목적 이외의 정치문제에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회규 제4조 "국법 범위와 문명제도의 이내 행동으로 或 민을 계도하며 或 정부에 건의할 事"를 근거로 들어 일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목적에 관계되는 일에 한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정치 참여는 하겠음을 제기하였다.³⁹⁾ 대한자강회 회장 尹致昊에 따르면, 자강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현 내각에 있는 무능한 자들을 대치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물들을 양

35) 安國善, 『政黨論』, 『會報』 제3호(1908.6), 24~26쪽 참조

36) 金成喜, 『政黨與政黨互監督論』, 『會報』 제9호(1909.1), 1쪽

37) 『敬求志士同情』, 『會報』 제8호(1908.11), 57-58쪽 참조

38)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的 責任』, 『會報』 제2호(1908.5), 22쪽

성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한다.⁴⁰⁾

대한자강회의 지도적 인물이자 고문인 大垣丈夫도 자강회 임원회에서, 정치가는 자기의 의견을 타인에게 건의하여 실행케 하는 것보다 스스로 國政에 나아가 실행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자강회는 기반을 확대하여 현 정부를 대신하여 국정담당의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⁴¹⁾ 나아가 대원장부는 통상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本年 四月 本會 創立 時에 余 竊惟하되 第一期 六個月間은 本會의 趣旨의 을 中外에 宣言하고 世人의 誤解가 無함을 務하여 本會의 基礎를 確立함을 要하고 第二期 六個月間은 全國 各道의 同志者를 募集하며 憂國의 人士를 團結하여 民論을 歸一함을 要하고 第三期 六個月間은 本會活動의 時期니 民意를 代表하여 國政을 改善함을 要한다 하였더니...⁴²⁾

곧 대한자강회는 창립 당시부터, 자강회를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동지를 결합하여 민의를 통일한 후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당을 조직하고 ‘평화적인 수단 방법’으로 정권을 인수하여 국정을 개선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다.⁴³⁾

이와 같은 정당정치를 통해 ‘국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자강회의 주도세력이었던 尹孝定 등과 천도교의 吳世昌, 權東鎭 및 大垣丈夫 등이 1907년 11월 대한협회를 조직하면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

尹孝定은 1907년 11월 24일 대한협회 제1회 총회를 통하여 대한협회가 정당

39) 尹孝定 編纂, 『本會會報』, 『月報』 제14호(1906.7), 12쪽

40) 『尹致昊日記』, 1906년 5월 6일 (柳永烈, 『大韓自強會의 愛國啓蒙運動』, 『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史研究』(一潮閣, 1987), 18쪽에서 재인용)

41) 尹孝定 編纂, 『本會會報』 중 〈大垣丈夫의 演說〉, 『月報』 제5호(1906.11), 41쪽

42) 大垣丈夫, 『所感一則』, 『月報』 제5호(1906.11), 46-47쪽. 대원장부는 주의 정책을 ‘公議輿論’에 기초하여 民心의 向背에 따라 進退消長하는 文明國의 政黨을 애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國情은, 각부 대신 중에 民望있는 자가 없고 여론에 相背하여 國事를 이끌어가므로 “最히 善良한 趣旨·目的으로써 團體를 成하여 全國 各道의 民心을 歸一하며 平和의 手段方法을 依하여 政權을 授手하고 其政府는 全國의 民心으로써 後援을 삼아 君命을 奉承하여 國事를 處理”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3) 柳永烈, 앞의 글, 62쪽 참조

적 조직임을 분명히 하였. 그는 “政治會(즉, 정당인용자)란 현시의 國政으로써 萬般事爲를 강구하여 정부의 채용을 요구하며 사회의 개량을 실행”하는 것이라 하고, 정당의 本旨는 “국민 다수의 대단체를 형성하여 인민사상을 통일”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단체, 곧 정당이 바로 대한협회라고 하였다.⁴⁴⁾ 나아가 대한협회는 전국의 사상을 통합한 ‘民聲發表의 기관’을 목표로 하는 ‘大韓大政黨’임을 표명하였다.⁴⁵⁾

대한협회는 《會報》를 통하여 정당의 방략을 밝히고 있다.

尹孝定은 1908년 5월 《會報》 제2호에서 시국의 급무로서 정부의 폭도 진압과 함께 민간유지자들은 “전국의 사상을 통일하여 유력한 정당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그리고 安國善은 지금 한국에 정당 조직이 필요한 데, 자신의 黨, 곧 대한협회에 다수의 당원이 들어오길 바라지만 확실한 주의를 세우지 않은 사람의 입당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⁷⁾ 즉 정치상 동일한 주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同一主義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헌(군주)정체이다. 대한협회는 공화주의, 혁명주의, 사회주의 등을 반대하고 ‘비교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진보주의, 즉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다.⁴⁸⁾ 둘째로는 한국과 일본 “쌍방의 감정과 福利를 조화하기에 공평한 정책”인 일본의 보호정책 아래서 국권회복의 준비를 위한 실력양성주의이다. 합방론에 대해서는, 이미 한·일 양국이 ‘을사5조약’을 통하여 세계 열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써 양국의 복리를 증진하기에는 현상 유지, 즉 보호정치로써 충분하며, 합방론은 자국의 발전 경영을 꾀하는 애국심과 ‘歷史와 國性’이 다른 두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양평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여 반대를 하였다.⁴⁹⁾ 세째로는 무력행동을 하는 의병을 절대 반대하고, 국법의 범위 내에서 치안을 방해하지 않는 정당정치

44) 尹孝定, 「大韓協會의 本領」, 『會報』 제1호(1908.4), 45쪽

45) 金嘉鎭, 「開會趣旨說明」, 『會報』 제8호(1908.11), 54쪽; 大韓協會, 「敬求志士同情」, 『會報』 제8호, 57~58쪽 참조

46) 尹孝定, 「時局의 急務」, 『會報』 제2호(1908.5), 61~64쪽 참조

47) 安國善, 「政黨論」, 『會報』 제3호(1908.6), 25쪽

48) 大韓協會, 「時局에 對한 意見書」, 『大韓民報』 1909년 7월 2일자; 尹孝定, 「大韓協會의 合邦論에 對한 意見」, 『大韓民報』 1910년 1월 20일자

에 의해 '평화적 수단 방법'으로 정권을 引受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협회는 '忠愛有志之士'를 결합하여 정당을 구성하고 전국의 사상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尹孝定은 "금일 세계는 公議 輿論에 치중하고 국민을 기초로 하여 정치의 방침을 세우는 것"이 문명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전국 志士의 의견을 모으고 그 여론에 의하여 정치적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 '政治運動의 良策'이라 하고, 따라서 유력한 정당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전도를 구제하는 大效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民間有志者로서 전국의 사상을 통일하여 유력한 정당을 수립하는 것이 시국의 급무라고 주장하였다.⁵⁰⁾ 大垣丈夫는 이미 대한자강회 시기에, 한국 사정에 비추어 '讀書知理'의 식자층 10만 명 가운데 자강회의 취지와 같은 생각을 가진 5만, 6만 명이 단결하면 한국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한 적이 있었다.⁵¹⁾

그러므로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國事に 관계가 없는 자로 보았던 '農·工·商·勞動의 無學無智輩, 僧侶, 病人不具者' 등을 제외⁵²⁾ '民間有志者'를 民意의 담당자로 간주하였다. 이 때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민간 유지자는 新著作家·번역가·신문가·잡지가·소설가 등의 문필가, 유학생, 망명 정치가, 사립학교 설립자 및 교사, 商社 은행의 주무자, 척식회사 위원 주주 등 학문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紳士, 學士, 志士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³⁾ 곧 대한협회는 그 사회적 기반을 신지식층, 개화파계열의 정치인, 지주 및 신흥부르주아층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⁵⁴⁾

49) 尹孝定, 위의 글

50) 尹孝定, 『時局의 急務』, 『會報』 제2호(1908.5), 64쪽

51) 大垣丈夫, 『所感一則』, 『月報』 제5호(1907.1), 48쪽 참조

52) 大垣丈夫, 같은 글, 48쪽

53) 尹孝定, 『我會의 本領』, 『會報』 제9호(1908.12), 63~64쪽

54) 박찬승, 앞의 책, 68쪽. 김도형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대한협회 등 각종 '애국계몽운동단체'의 지방 지회도 대체로 전직관료, 지주, 요호부민, 상인층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4. 대한협회의 政治活動

1) <時局에 對한 意見書> 제출

대한협회는 1909년 7월 1일부로 이완용 내각과 통감부에 <時局에 對한 意見書>를 제출하였다.⁵⁵⁾ 이 의견서는 곧 정당으로서의 대한협회가 당시 제기되고 있던 합방론에 대처하면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협회는 동양의 대세와 한·일 양국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세계 열강이 한국의 부강함을 인정할 때까지는 일본과 공동의 책임으로 국가계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국계발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인은 공동의 사상으로써 양국에 공평한 여론을 창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한협회의 시국에 대한 의견을 정치, 경제,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정치에 대한 의견

대한협회는 정치상의 의견에 대하여 크게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통감부의 대한정책이 성실과 관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대한협회는 통감정치는 조약에 의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施政의 시비를 논하는 것은 조약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통감이 伊藤博文에서 曾禰로 바뀌었지만 대한정책의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로는 통감정치가 한국의 이천 만 인민을 중심으로 하여 시정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세째로는 한국정부는 인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실천하여 國運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로는 지방소요를 鎮定하는 것이 목하 제일의 급무라고 보았다. 그 진압에 있어서는 외국 병사의 파견을 중지하고 지방 진위대를 再興하거나 한인 경찰대를 증설하여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째로는 일본인 관리 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용하는 것은 조약상의 권리이지만, 통감이 내각을 감독하고 있으므로 주요직 이외에는 일본인을 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협회는 일본인 관리의 임용이 韓人の 영예심을 빼앗아 불평을

55) 「時局에 對한 意見書」, 『大韓民報』 1909년 7월 2일자. 이하의 서술 내용은 특별한 전거가 없는 한 이 의견서에 근거한 것이다.

야기하며, 관민간의 의사를 소원케 하여 정치상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여섯째로 지방관의 추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은 新政時代로서 널리 전국에서 인재를 구해 신정을 잘 이해하는 자로 지방관을 임명해야 하며, 대세와 신정에 견문이 좁은 '地方有風力者' 만 임용하는 것은 민심 통일과 新政 실시에 불이익이라고 보았다.

이상 정치상의 의견을 볼 때, 대한협회는 의병을 비롯한 지방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진정시키고, 보호정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정치를 실시할 것과 일본인 관리를 감축하고 新政에 맞는 인재를 널리 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합방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여론정치를 무시하는 이완용 내각을 비판하면서, 대한협회를 지지하는 신지식층의 권력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경제에 대한 의견

대한협회는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을 수입자이자 소비자로 보았다. 그리고 당시 한국 공황의 원인으로서 수출입의 불균형, 사업자금의 불용통, 지방세금의 불용통, 화폐제도의 비정비, 新政경비의 대팽창 등을 들고 있다.

대한협회는 국민경제의 대혁명기에 한국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산흥업을 장려하되 투기적 사업은 주의할 것, 둘째 기업심·저축심을 길러 사치품에 생활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근검저축을 장려하여 각처에 저축금융기관을 설치하고 예금을 장려할 것, 세째 해외수출 특히 우선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과 만주 등지에 수출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보조 방침을 강구할 것, 네째 우선적으로 교통기관·실업기관 등 생산적인 방면에 국비를 사용하여 국가의 富源을 개척할 것, 다섯째 금융기관의 설비 특히 국가 경제신용의 최고 담보자인 중앙은행의 설립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각지에 부분 은행을 설립하고 중앙은행과 연락 상응하여 한국 금융의 기초를 확실히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③ 교육에 대한 의견

대한협회는 교육상의 방침에 있어서 '比較的 自由主義'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부가 교육에 간섭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서 학교를

감독하고 교과서를 검정하여 자국의 시대 요구에 적응한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에 극단적으로 간섭할 경우 러시아와 같은 '不平黨'을 自造하여 한·일 양국의 국제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이완용 내각 퇴진운동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협회는 창립 초기부터 실력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의 전개와 함께 정당정치를 통한 권력의 장악을 전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가 그 세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동과 압제적 명령으로 국가와 인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國利民福을 위해 그 부당함을 聲明하고, 국민의 여론에 따르는 정당 정치에 의해 평화적인 수단으로 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음을 피력하였다.

대한협회는 1908년 8월 金嘉鎭-尹孝定 체제를 구축한 이후 적극적으로 반정부 운동에 나섰다.

당시 一進會는 6~8월간 "이완용은 국정을 농락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가족당으로 조직"하려 한다고 이완용 내각의 총사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완용은 "일진회가 그 黨中으로부터 인사를 등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총리대신을 공격하여 현 내각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농상공부대신 宋秉畷을 내부대신으로 전임시켰다.⁵⁶⁾

일진회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한국 병합을 주장하는 일본내 합방론자들, 특히 內田良平과 일진회가 이등박문을 사직시키고자 일본 정부에 공작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었다.⁵⁷⁾

이러한 때에, 대한협회는 1908년 8월 26일의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계기로 이완용 내각 반대운동에 나섰다.⁵⁸⁾

대한협회는 1908년 9월 14일 동양척식회사 문제에 대하여 내각에 교섭을 하고

56) 金度亨, 『日帝侵略初期(1905~1919) 親日勢力의 政治論 研究』, 『啓明史學』 第3輯, 1992, 39~40쪽

57) 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김세민 옮김), 『近代韓日關係史研究-조선식민지화와 국제관계』(玄音社, 1994), 237쪽

58) 동양척식주식회사법과 관련한 한국민의 대응에 대해서는 朴賢緒, 『東拓設立에 대한 韓國國民의 對應』, 『李海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70, 317~333쪽 참조

〈質問書〉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의 '根本的主義'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곧 한국민의 산업에 방해되는지의 여부, 일본인 이주의 정도, 토지 매수의 권한 등에 대한 것이었다.⁵⁹⁾ 이러한 행동은 '民黨'으로서의 대한협회가 "국민된 分義와 국민대표된 책임을 并擔하였으므로 법령에 疑義가 있는 곳을 질문하여 국민 전체에 선포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은 대한협회에서 보낸 대표자와의 면회는 물론 질문서조차 접수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한협회는 이완용 내각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문명정치를 모방하고 世界通則을 準據하여 시정개선을 표방하고 維新時代를 聲明하는" 시기에 민당을 멸시하고 민권을 유린함으로써 公議 公論을 어기고 내각이 고립되는 悲境을 자초하였다고 강렬하게 비난하였다.⁶⁰⁾

따라서 대한협회는 "憂時愛國之士가 主意方針을 세우고 단체를 통합하여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며 국가의 隆運을 촉진하는" 단체로서, 내각이 民論 公議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노예처럼 생각하여 國事を 官憲의 전유물로 오인할 경우에 유신시대의 정치를 운용하기에 부적당한 내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통박하였다.⁶¹⁾

나아가 대한협회는 현 내각에 대하여 "황실을 존중하며 국가를 진흥하는 중앙정부의 자격과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²⁾ 곧 이완용 내각이 성립한 이후, 지방의 소요는 더욱 확대되고 일본의 파병이 증대되어 국고가 낭비되고, 인민이 산업이 파멸하며, 韓·日의 무역이 두절되고, 兵憲들의 노고가 극에 달하여 소요의 진정은 기약할 수 없으므로 내각은 自退하여 "그 지위를 賢者에게 양도함은 政治上 主義"라고 하였던 것이다.⁶³⁾ 이것은 사실상 이완용 내각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08년 후반기에서 1909년 초반까지 내내 계속되었다. 특히 대한협회는 일본과의 제휴를 주장하는 이완용과 합방론을 주장하는 일진회의 대표 송병준을 집중적으로 비난하였다.

대한협회는 마침내 11월 17일 대한협회 1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정당이라는 標幟를 세우고 전진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였으나, 이제는 '地方有志紳士'의

59) 『質問書』의 내용은 『會報』 제6호(1908.9), 62~63쪽 참조

60) 『質問書』, 『會報』 제6호, 64쪽

61) 같은 글, 65쪽

62) 權東鎮, 『政府의 責任』, 『會報』 제11호(1909.2), 57쪽

63) 『警告書』, 『會報』 제6호, 66~67쪽

지회설립이 다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차 전국 民志를 통일하여 '大韓大政黨' 대한 협회의 聲譽가 세계에 저명할 것이라고 축하하였다. 나아가 '조국정신' 과 '自修政策' 을 經緯로 하여 전국의 사상을 통합,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이를 '民聲機關' 으로 발표하고 국법의 범위 내에서 문명제도를 실천하면 인민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이 평화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⁴⁾

이처럼 대한협회가 대정당을 자부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대한 '질문서' 제출 문제를 계기로 이완용-송병준 내각에 대한 퇴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곧 위에서 언급한 일진회의 행동과 함께 당시 국내에서는 현 내각이 도태되고 연립내각이 들어설 것⁶⁵⁾이라는 등의 내각변동설이 1908년 후반~1909년 초반 내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등박문이 일본으로 귀국한 후 통감 사임이 논의되고, 1909년 2월 송병준이 실각되었으며, 대한협회의 찬성원 大垣丈夫가 일본을 다녀오는 등 정계는 매우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었다.⁶⁶⁾ 1909년 3월에는 이완용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曾和爾 통감으로부터 반려되기도 하였으며,⁶⁷⁾ 伊藤博文의 사임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⁶⁸⁾

대한협회의 지도부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 속에서 동양척식회사법에 대한 대한 협회의 질문서 사건을 통해 이완용 내각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대한협회가 합방론을 주장하는 일진회와는 다른 民黨임을 내세워 정부의 권력에 접근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1909년 4월 통감이 이등박문에서 曾和爾로 변경되고(6월 임명), 통감부와 한국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합병(합방 혹은 병합이라고도 함)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⁶⁹⁾ 이 때를 즈음하여 각 정당들은 합방론에 대응하면서 내각의 장악을 타

64) 大韓協會, 『敬求志士同情』, 『會報』 제8호(1908.11), 56~58쪽 참조

65) 『大韓每日申報』, 1908년 12월 1일자. 이완용 내각의 변동설에 대해서는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12월의 잡보 및 논설 참조

66) 이와 같은 정치정황에 대하여 『大韓每日申報』는 1908년 10~11월의 『雜報』란에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67)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13일자

68)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25일자

69)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13일자

진하고 있었고 대한협회의 김가진-윤효정 지도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항간에는 송병준이 물러나고 대한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朴齊純이 내각에 들어감으로써 대한협회는 지방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수년 내에 내각 전부가 대한협회에게 돌아갈 것이며, 당시 정세로 보아 내각의 일부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풍문도 나돌았다.⁷⁰⁾ 이 때 대한협회는 이등박문에게 감사장을 보내는 문제로 《대한매일신보》로부터 “排日을 표방하고 親日의 心底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⁷¹⁾ 이러한 현상은 점차 대한협회의 정당정치 활동 속에서 국권회복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약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점은 대한협회가 《대한민보》 1909년 7월 14,15일자에 게재한 사설 〈前統監伊藤公爵을 送함〉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사설에 따르면, 伊藤博文은 영국이 이집트에 행한 정책, 곧 공통이익주의·자치주의·평화주의를 한국에 모방하고자 했다고 보았으며, 伊藤博文의 통감정치로 말미암아 배일사상을 가지고 있던 세력을 형식적이고 소수이지만 한·일 양국의 이익공통설과 一家親睦論을 스스로 주장할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위대한 정치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⁷²⁾ 이것은 대한협회의 김가진-윤효정 체제가 당시 합방론의 현실화를 견제하고, 이등박문이 표면적으로 주장해온 보호정치의 계속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時局에 對한 意見書〉와 관련시켜 볼 때, 대한협회가 보호정치의 유지를 주장하고, 일진회가 합방론을 주장한 것 이외에, 한국의 근대문명화와 이완용 내각 반대 등 양자의 주장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일진회의 제의로 일진회·서북학회·대한협회 3단체 연합이 제기되었다.⁷³⁾ 9월부터는 政見委員會가 구성되고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합동 대연설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⁷⁴⁾ 그렇다면 대한협회의 김가진-윤효정 체제가 일진회

70)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18일자

71)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16일자

72) 「前統監伊藤公爵을 送함」, 『大韓民報』 1909년 7월 15·16일자

73) 일진회·서북학회·대한협회의 3단체 연합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李鉉淙, 『大韓協會에 關한 研究』, 『亞細亞研究』 제13권 3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참조

74) 『大韓民報』 1909년 9월 24일자. 9월 23일에 열린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간담회에서 1. 우리 양당은 국민단결을 주장 실행함, 1. 우리 양당은 국리민복을 계발함에 일치 협력함이란 〈趣旨〉를 합의하였다.

와 손을 잡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협회는 먼저 일진회와의 결합논의에 대하여 지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정당으로서 일진회와 제휴하려는 이유는 “國民統一主義”를 실행하여 국가의 急務를 先하고 黨派의 私見을 後로 함에 있다”고 전국 각군 지회에 전달하였다.⁷⁵⁾ 그런데 대한협회의 윤효정은 일진회와의 결합이 ‘聯合’이 아니라 “각기 本體가 不動하고 협정사건 발표시 兩會의 名義를 連書”하는 수준의 ‘聯結’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협회는, 일진회와 함께 한국의 2대 정당으로서, 일진회와 창립동기와 행동에 차이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협력 共進”하게 된 이유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① 국민생활 곤란의 구제, ② 거국일치한 여론의 확장, ③ 國情을 온건히 하여 현상을 유지함 등이었다. 곧 실정과 지방소요로 국민생활을 참혹하게 만든 이완용 내각에 반대하고, 양국협약의 정신을 標準하여 일본의 “指導扶掖을 信認”하며, 실력을 양성하여 타일에 自治를 기도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국권의 문제를 讓後하고 먼저 민족의 문제로써 실업과 교육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일본인사의 극단론, 곧 합방론을 배척하고자 일진회와 연결을 희망한다는 것이다.⁷⁶⁾

그러나 대한협회의 金嘉鎭-尹孝定 체제의 이러한 의도, 곧 이완용 내각 반대와 합방론 저지의 의도는 일진회가 <合邦上書文>을 발표함으로써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대한협회의 임원과 지도층은 지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점차 지회원들은 대한협회를 탈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당으로서의 대한협회가 상대 정당인 일진회와 타협한 것은, 일본과의 합방을 방지하고 보호정치를 유지하면서, 일진회와 제휴하여 국정 수행 능력이 없는 이완용 내각을 퇴진시키고, 직접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치운동의 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대한협회는 사회진화론적 시대인식과 ‘동양평화론’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일

75) 『全國十三道各郡支會에 發한 指明書』, 『大韓民報』 1909년 10월 10일자

76) 尹孝定, 『兩會聯結의 主旨』, 『大韓民報』 1909년 10월 26일자; 대한협회에서 작성한 『聲明書草案』, 『大韓民報』 1909년 11월 30일자

본의 보호정치를 인정하고, 의병의 무력항쟁을 무모한 것으로 반대하며, 일본을 동양의 문명선도자로 또는 한국 문명화의 모델로 인식하면서 국권회복을 준비하는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부패하고 무능한 이완용 내각에 반대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정당정치를 통하여 일본의 통감정치 아래서 한국을 근대 문명국가로 이끌고자 하였다.

대한협회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입헌대의정체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건설과 국민정부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근대적인 정당을 당시 정부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중심체로 설정하였다. 이 때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정치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조국정신을 가지고 교육과 식산을 발달시켜 국권을 회복하는 중심단체로서의 정당은 곧 대한협회였다. 또한 대한협회는 정당의 분립, 특히 양당제를 추구하였는데 이 때 또 하나의 정당은 일진회였다. 대한협회는 정치상 동일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곧 정당으로서 국권회복운동에 있어서의 실력양성주의, 합방론을 반대하는 현상유지 즉 보호정치의 유지, 의병운동 등 무력행동의 반대 및 평화적인 정권 수수 등이었다. 그리고 정당으로서의 대한협회는 신지식층, 개화파계열의 정치인, 지주 및 신흥부르주아층을 자신의 사회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정당정치에 대한 이론과 당시의 대표적인 정당으로 위치를 설정한 대한협회는 1909년 7월 정부와 통감부에 <時局에 對한 意見書>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는 곧 정당으로서의 대한협회가 당시 제기되고 있던 합방론에 대처하면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었다. 정치상으로는 의병을 비롯한 지방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진정시키고, 보호정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정치를 실시할 것과 일본인 관리를 감축하고 新政에 맞는 인재를 널리 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합방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여론정치를 무시하는 이완용 내각을 비판하면서 대한협회를 지지하는 신지식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경제상으로는 식산공업의 관점에서 투기적 사업에 반대하면서 금융기관의 설치, 수출장려, 교통기관과 실업기관의 발달, 중앙은행의 설립에 의한 금융의 기초 확립 등을 내세웠다. 특히 교육상으로는 정부 주도로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양성하되 지나친 간섭보다는 '비교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현실인식과 당론을 가진 대한협회는 구체적으로 이완용 내각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이완용 내각의 도태설과 새로운 내각의 구성에서 대한협회의 참여 가능성, 통감의 교체, 일본의 합방론으로의 對韓政策 변화 등의 정치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협회의 이완용 내각 반대의 주장은 동양척식회사법 승인과정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대한협회는 동양척식회사법의 근본적 의도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 이완용 내각이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가 民黨을 무시하고 민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국 합방론이 현실화 되고, 이완용 내각이 국정운영에서 계속적인 무능을 나타내자, 합방론을 저지하고 통감부의 보호정치 아래서 이완용 내각을 대신하여 정권을 장악하고자 당시 친일단체로 비판받고 있던 일진회와 '聯結' 하기 위해 일진회의 연합 제의에 참여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연결 시도는 일진회가 합방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파기되었다.

즉 대한협회는 한국의 문명화가 이루어져 국권을 자주적으로 이끌만한 실력이 양성되면, 한국의 자주독립이 회복될 것이라 믿고, 통감부의 보호정치 아래서 정당정치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이완용 내각을 대신하여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I. 著書 및 論文

- 金度亨, 『日帝侵略初期(1905~1919) 親日勢力的 政治論 研究』, 『啓明史學』第3輯, 1992
- 金度亨, 『大韓帝國期の 政治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4
- 金度勳, 『共立協會(1905~1909)의 民族運動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4, 지식산업사, 1989
- 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김세민 옮김), 『近代韓日關係史研究 - 조선식민지화와 국제관계』,玄音社, 1994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3
- 朴賢緒, 『東拓設立에 대한 韓國民의 對應』, 『李海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70
- 李鉉宗, 『大韓協會에 關한 研究』, 『亞細亞研究』 제13권 3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 柳永烈, 『大韓自強會의 愛國啓蒙運動』, 『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史研究』, 一潮閣, 1987
- 柳永烈, 『大韓協會의 愛國啓蒙思想』, 『李載堧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한울, 1990
- 趙東杰, 『韓末啓蒙主義의 構造와 獨立運動上의 位置』,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II. 資料

1. 『大韓自強會月報』
2. 『大韓協會會報』
3. 『大韓每日申報』
4. 『公立新報』/『新韓民報』
5. 『大韓民報』

Abstract

The Theory of Political Party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Dae-Han Hyôp Hoe

Yoo, Young Nyol • Park, Chul Ha

Rejecting armed resistance of Ūbyong(義兵), admitting Japan's protective government for Korea on 'the theory of Oriental peace' and the recognition of the age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evolution, Dae-Han Hyôp Hoe(大韓協會) had insisted on the movement for restoration of state power, knowing Japan as a model of Korean civilization, or the leader of Oriental civilization.

On the base of the facts like this, Dae-Han Hyôp Hoe asserted the construction of nation of people and establishment of government of peopl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it thought the modern political party as a central body of the government and state in those days. It was just regarded Dae-Han Hyôp Hoe as such political party at that time. And Dae-Han Hyôp Hoe had pursued the separation of political party, especially two-parties system; another political party was Il-jin-hoe(一進會).

Dae-Han Hyôp Hoe had regarded new intellectual class, politician of 'Kaehwapa (開化派)', landholder and neo-bourgeoisies as the social bases of itself. Dae-Han Hyôp Hoe had made an effort to take the reigns of government in place of the cabinet of Lee wan yong(李完容) that was corrupt and inefficient and to lead Korea to the modern civilized state with party politics.